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| <h1>보도자료</h1> | 2016. 1. 22(금) | |
| | | 작성 · 문의 | 사회조정실 교육정책과 과장 김주연 / 서기관 한레지나 (Tel. 044-200-2323) |
| 엠바고 | 16:3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 | | |

황교안 총리, 누리과정 관련 긴급 현장 상황 점검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2일(금) 경기도 광명시 트인아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,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.
 - 이번 현장 간담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시·도교육감과 시·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여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.

※ 붙임 : 황교안 총리 인사말씀자료

< 붙임 :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말씀 >

-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,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
 - 이에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음

-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,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,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행되었음
 -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도입을 찬성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한바 있음
 -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,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임

-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보고있음
 - 교육부가 이미 작년 10월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수를 모두 고려하여 누리과정 지원액 전체를 교부하였으며
 -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상당히 호전되어 전년대비 1.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,000억원도 편성·지원될 예정임
 - 또한,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해본 결과,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

- 일부에서는, 대통령 공약에서 3~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%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,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음
 - 그런데 일부 교육감·지방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,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임
 - 특히 서울·경기 등 지방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고,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음
- 정부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를 설득하여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도록 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
 -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, 난방비·급식비 등 운영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유감임
 - 학부모와 소중한 우리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가 아니길 바람
- 오늘,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람